

지난 14일 조계종과 정부가 수락산·불암산(6공구) 공사를 중단하고 북한산 관동도로 노선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그동안 노선 재검토를 계속 주장해온 불교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이 수용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보 전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노선의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해왔던 정부가 노선 결정 과정에서 환경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경제성과 똑같이 고려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향후 정부 정책의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북한산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왔던 불교계와 환경·지역단체들 간의 불협화음이 그것이다. 환경·지역단체들은 △수락산 북한산 구간에 대한 불교계 대표성 위임문제 △삼각형 노선재검토위원회 활동기간(45일) △삼각형 과정에서 다른 단체들의 의견 수렴 부족 등을 거론하며 합의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대안노선 검토 및 결정 과정에서 안개되는 부담을 털어야 하는 것도 과제다. 조계종 공대위와 정부가 14일 합의한 문서에는 △의정부 외곽 노선 △북한산 국립공원 외곽 우회 노선 △기존노선 등 3개의 노선을 검토대상으로 한정했다.

각 노선별 특징을 보면 △의정부 외곽 노선은 사패산(4공구), 수락산(5공구), 불암산(6공구)을 모두 우회하는 노선이다. 조계종 공대위와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동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합회의는 이 노선을 최선의 대안노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이미 진행된 공사와 투입된 경비 문제. 3월 말을 기준으로 17% 정도 공사가 진행됐고 3천 3백여원의 공구가 투입됐다. 그러나 작년 7월 한국생태경제연구회는 관동도가 우회도로보다 사회·환경적 비용이 1조 34억 원 정도 더 든다고 지적했다.

▲북한산 국립공원 외곽 우회 노선은 사패산 구간은 우회하되 수락산, 불암산 구간



‘대안노선’에 역사문화 가치 고려

북한산 관동도로 노선 재검토 합의 의미

불교계 주장 등 수용 문제해결 진일보 각 단체·지역간 불협화음 극복이 과제

은 관통하는 것이다. 이 중 수락산 터널은 30%정도 공사가 진행됐고, 북한산 구간 일산방향은 6일자로 관통했으며 퇴계원 구간도 관통을 100m 정도 남겨두고 있다. 이 노선이 선정될 경우 선정 책임에 대한 조계종 공대위의 부담이 예상된다. 즉 최종 결론은 노선재검토위나 국무총리실에서 조정·결정하게 되어있지만, 불교계는 합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환경

단체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기존노선은 사패산 뿐 아니라 수락산 불암산을 관통하는 노선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 노선의 백지화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패산만 우회하던 사패산 수락산 불암산 모두를 우회하던 이것은 도로공사의 제시안일 뿐 불교계나 지역·

환경단체가 공식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노선 결정 후 파장은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

금정산·천성산 문제는 대안노선검토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투명해짐으로써 일단은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노선검토위원회 구성이 이뤄질 수 있느냐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대안노선을 먼저 검토하고 이를 기존노선과 비교 검토하자는 시민종교대책위측의 주장과 모든 노선을 함께 검토하자는 정부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 이어서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명우·천미희·남동우 기자

별빈자 사면 늦춰질듯

종헌개정·대상자 심사 기간 너무 촉박

지난 10일 조계종 사면복권검토위원회가 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별빈자를 포함하는 모든 징계자를 사면키로 결의하고, 이를 위해 29일 임시종헌총회가 열리게 됨에 따라 부처님 오신날을 기한 사면 단행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별빈자들에 대한 사면은 이번 사면조치에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1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별빈자와 제적 이하 징계자들의 사면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부처님 오신 날 사면에서 별빈자들이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종화나 총무원의 다른 관계자 대부분도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이와 똑같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종헌 개정에서부터 사면 대상자

회를 통한 별빈자 사면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보편적 견해다.

물론 부처님 오신 날 별빈자 사면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종헌 개정에서부터 별빈자 사면 공고까지 이틀 안에 이뤄지고, 일주일 안에 대상자 심사를 마친다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이 단순히 ‘가능성’에 그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조계종은 보름여 전부터 별빈자를 제외한 징계자를 대상으로 사면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별빈자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종화와 총무원 집행부가 엄격한 심사보다 ‘대화형’에 무게를 둘 경우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사면은 정치적인 문제다. 종회 내 합의가 이

‘6월 임시종회 통한 사면 가능성’ 지배적

부처님오신날엔 제적이하 징계자만

심사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일을 감안할 때 종회가 열리는 29일부터 부처님 오신 날까지 10일간으로는 별빈자 사면을 위한 모든 절차를 소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별빈자 사면이 이뤄지기까지는 ‘29일 종회에서 종헌 개정→개정된 종헌의 원로회의 인준→중앙종회의장의 개정 종헌 공포→별빈자 사면 공고→사면 신청 접수→대상자 심사’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보통 1개월 정도의 시일이 걸린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 오신 날 별빈자 사면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현고스님이 “이번에는 모든 징계자를 사면할 수 있는 근거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일정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6월 임시종

회라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면 시기와 달리 종헌 개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관계자들도 적지 않다. 현재로서는 종정스님과 원로회의가 교사와 유사를 통해 사면의지를 밝힌다

이어, 종회 내 모든 계파의 종정스님들이 참여한 사면복권검토위원회가 대사를 결의함으로써 별빈자 사면의 전제 조건인 종헌 개정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사면에 대한 각 교구본사간의 이해가 엇갈릴 수 있고, 종회 내 각 계파의 결속력이 과거와 달리 다소 느슨하다는 점에서 재적의원(81명) 3분의 2(54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종헌 개정이 쉽지 않은 일일 것이라는 일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을 위해 조계종 총무원이 양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종단의 문화재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부장 탁연 스님이 이달 들어 국회를 잇달아 방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난 데 이어 16일 오후엔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직접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을 찾아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21세기는 지식·정보와 함께 문화가 중요한 패러다임이 되는 문화의 세기”라며 “1급행인 현재의 문화재청 구조와 인력으로는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계종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 총력

법장 총무원장·탁연 스님 정부·국회 방문 21~22일 행사위 법안 소위 심사서 윤곽

조계종이 이처럼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의 윤곽이 21~22일쯤이면 드러나기 때문. 행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23일 행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승격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만, 법안심사소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관례상 소위원회 법안심사가 결정적 역할을 쥐고 있다.

조계종의 쟁점을 속에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위원장 강찬석)는 16일 논평을 내고 “문화재청 승격은 단순히 행정조직 확대나 공무원 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15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에서도 소속 의원들은 이창동 문공부장관에게 “장관이 직접 행사부장관을 만나 문화재청 승격을 설득하라”고 주문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새롭고 정갈한 음식점

삼청동 고조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식 일품요리로 건강을 지킵시다

사전 전화예약 : 02)732-7355
삼청동 우리은행 뒤편(우리은행 주차장 이용)

宗團和合을 위한 懺悔의 글

佛菩薩과 歷代 祖師前에 懺悔三拜 하옵니다.

僧伽단 眞理를 中心으로 和合을 生命과도 같이 여기며 모인 修行者들의 共同體입니다. 僧伽에 있어 構成員들의 利害와 得失은 결코 和合보다 優先할 수 없다는 엄연한 眞實을 잠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側面에서 지난 98年 일어난 宗團事態는 그 名分과 動機의 當爲性을 擧論하기에 앞서 國民과 宗徒들 앞에 심히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그 動機가 宗正 猓下의 敎示 奉戴와 敎團淨化 및 民主化에 있었다 하더라도 國民과 宗徒 여러분에게 커다란 失望과 憂慮를 惹起시키는 暴力事態로 飛火되게 한 責任은 어떠한 辨明으로도 容納될 수 없음을 가슴깊이 痛感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自省과 懺悔가 있었기에 小衲들은 지난 5年餘間 各者의 修行道場에서 衲子의 本分을 受持하고 懺悔精進하며 自肅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宗正 猓下와 元老大德 큰스님들께서 敎示와 元老會議 諭示를 통해 慈悲寬容을 베풀어주시고, 宗團發展과 僧伽和合을 念願하는 全 宗徒들의 期待를 안고 總務院長 法長스님 體制가 出帆하면서 大乘의 決斷으로 宗團大和合 措置를 積極 推進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98年 總務院長 選出節次를 놓고 葛藤을 빚었던 宋月珠 前 總務院長스님에게 本意아니게 累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眞心으로 謝過의 말씀을 드리며, 너그럽게 攝受해 주셔서 眞正한 圓融和合의 轉機가 마련됐으면 하는 마음 懇切합니다.

비록 紙面을 빌어서나마 다시 한 번 國民과 宗徒 여러분에게 甚深한 懺悔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省察과 自肅의 時間을 거울삼아 和合僧伽 俱現과 宗團發展을 위한 隊列에 初發心の 姿勢로 돌아갈 것을 佛菩薩 前에 設드려 誓願드립니다.

佛紀 2547年 4月

'98年 宗團事態 關聯 懲戒者 一同